

## 서 평

陸仰淵·方慶秋 주편, 『民國社會經濟史』, 中國經濟出版社, 1991

杜恂誠, 『民族資本主義與舊中國政府』,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 민국시대 중국 자본주의 발전의 성격

강명희

서울대학교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 정치제도로써 민주주의 정립이 좌절을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세개(袁世凱)의 전제적 정치와 황제체제복귀운동(帝制運動), 군벌정치의 혼란기, 국민당(國民黨)의 일당독재, 항일전과 국공(國共)내전기, 그리고 대륙의 공산당 지배와 대만의 국민당 지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발전은 줄곧 지체되어 왔다. 신해혁명은 일반적으로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으로 성격지워지는데, 사실상 부르조아계급이 혁명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혁명은 아니었다. 단지,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발전이 좌절 내지 지체되었다면, 근대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1949년 공산정권 수립후는 논의로 하고, 1912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민국(民國)시대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왕의 연구는 다분히 공산주의혁명사의 관점이 관철된 도식적 평가의 경향이 강했다.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을 논증하기 위해, 그 혁명 대상이었던 국민당정권은 매판적 반동적 관료·군사세력이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하면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국가독점자본주의 또는 ‘관료매판자본주의’로 경제체제가 성격지워졌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 단계를 넘은 사회주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혁명 인식은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당연한 무관심을 초래했고, 경제사 연구는 생산관계의 변화에 집중되어 생산력 발전 문제를 도외시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중국경제사학계 연구 경향이 ‘實事求是’를 부르짖는 1980년대 이래 큰 변화를 보여 왔다. 위에 든 두 책은 바로 그와같은 변화 속에 이루어진 10여년간 집적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이전의 근대중국경제사 연구서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된다.

육양연(陸仰淵)이 주편한 『민국사회경제사』는 1912년에서 1949년까지 전민국시대를 다루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서 19세기 후반이래의 외국자본기업과 중국의 근대 공업·교통·금융·상업을 간단히 개괄하고 중국자산계급의 형성도 언급하여, 근대적 경제 부문인 자본주의의 출발시점으로부터 발전해 나가는 양상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두순성(杜恂誠)의 『민족자본주의여구중국정부(民族資本主義與舊中國政府)』(이하 『민족자본주의』로 약한다)는 1840년에서 1937년 남경국민정부(南京國民政府) 시기까지를 분석범위로 하였다. 전3장을 각각 청말 자본주의와 자산계급의 생성, 북경정부시기 자본주의발전, 국

민정부시기 민족자본의 집중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구분하여, 항일전시체제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자산계급의 발전을 국가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앞 책이 항전시기와 국공내전시기까지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 차이점이다.

연구대상에 있어서 『민족자본주의』는 공업, 금융, 상업분야의 자본주의 발전을 다루고 있는데 비해, 『민국사회경제사』는 상공업의 자본주의적 발전 뿐 아니라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중앙정부의 재정경제정책, 혁명근거지 또는 항일근거지의 재정과 경제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총 60만자 이상의 방대한 분량을 10여인이 공동저술한 것이기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시기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화 뿐 아니라, 양자 간의 관계 즉, 생산관계의 변화가 사회생산력의 발전 또는 변화에 미친 영향과 작용은 어떤 것이었나에 주목하여, 연구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킨 것이다. 후자도 주된 관심은 자본주의적 발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두 책에 나타난 중국근대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 이해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위 두 책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전기한 바와 같은 공산주의혁명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이 시대 역사연구에서 벗어나, 중화민국의 역사를 이 시대 주류를 이루는 역사전개과정으로 파악하는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객관적 입장은 연구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고정관념과도 같은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 시대를 ‘반식민지반봉건’사회경제체제라 규정하는 통설을 묵수해온 해묵은 관행과 그 속에서 소위 ‘관료자본주의’가 형성, 발전, 붕괴되는 과정이 중국자본주의의 봉건성이며, 민족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했고, 국민당독점자본주의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는 경제사에 대한 ‘정치적’ 이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근래 연구경향이 깊이 반영된 것이다. 셋째, 객관적 연구 태도는 자연히 이 시대의 경제적 성취, 발전에 대한 적극적 평가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론에 관해서는 1980년대 후반 이래 중국과 일본에서 다양하게 재검토되며, 그 애매모호성이 비판되고 있다. 1920-30년대 중국혁명의 성격 규정을 위한 당시 사회성격 규명의 관점차이가 봉건사회론-민주주의혁명과와 자본주의사회론-사회주의혁명과의 논전으로 전개된 이래 반봉건 반식민지사회론이 널리 사용되었다. 반식민지란 중국이 독립국에서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다는 국가 지위에 관한 것이고, 반봉건은 외국자본주의의 침입에 의해 봉건사회가 변화되어 半봉건·半자본주의사회가 되었다는 사회경제 형태에 관한 규정이다. 즉 반식민지화와 반봉건화는 원래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 두 가지 성질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두 개념이 반드시 연용될 이유도 없는 것이었고, 연용되는 경우도 ‘반봉건반식민지’사회로 표기되던 것이, 반드시 ‘반식민지반봉건’이라는 순서로 표기된 것은 1940년대 이후였고, 봉건제도 자본주의도 아닌 하나의 사회구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갔다. 특히 공산정권하의 사회주의 개조 이후에는 자본주의로의 과도기를 상징하는 반봉건(즉 半자본)보다, 자본주의단계를 뛰어 넘은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을 암시하는 반식민지 상태를 앞세워 반식민지반봉건으로 표현된 것이다.

반식민지반봉건 사회라는 개념이 애매하고 비학문적 용어임을 비판하며, 이 시기 중국 사회는 반봉건·반자본주의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을 사

회주의 초급 단계로 규정하는 인식은 중국의 사회주의혁명의 의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반식민지반봉건 사회경제체제로 뭉뚱그려진 20세기 전반에 관한 역사 이해도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두순성과 육양연은 모두, 이 시대 중국 경제의 구성요소로 봉건경제, 재중국 외국자본주의 경제세력, 국가자본과 사인자본의 존재를 중시하며, 민국시기 동안 봉건경제와 외국자본주의 경제세력이 차츰 쇠퇴해 간 데 반해, 자본주의 성질의 중국민족자본주의경제 부분이 확대되어 갔다고 파악하였다. 그 비중을 단적인 통계로 분석하면, 봉건경제 부분이 신해혁명 시기에 90% 이상에서 1937년 70%정도로 퇴조했고, 민족자본경제는 2%에서 20%정도로 증대되었다. 또 외국자본이 중국자본주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서 20% 미만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육양연, p. 5)

이 두 책은 또한 외국자본경제 또는 서방세력의 중국근대사에 대한 역할의 양면성을 중시하여, 중국을 반식민지 상태로 빠트리고, 중국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각종 특권을 누리는 압도적 외국자본과의 경쟁에서 성장이 저해되어온 부정적 측면과 동시에 외국자본에 의존하여 성장한 매판자본이 민족자본으로 발전하였다는가, 기술과 자본, 그리고 경영방식 등, 이들의 존재에 의존 또는 경쟁하며 발전한 측면,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 봉건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킨 민주정치와 과학문화등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긍정하고 있다.

다음 특징은, 국가자본과 사적 자본을 민족자본을 구성하는 두 부분으로서 이 시대 중국자본주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인정한 점이다. 이는 ‘관료자본주의’라는 비과학적 ‘통속적’ 개념으로 중국근대경제사를 개괄해온 오랜 관행에서 벗어난 큰 변화이다. 관료자본은 매판자본과 함께 중국자본주의 발전 초기의 산업자본의 출처로 외국자본과 구별되는 민족자본을 구성하는 것이었고, 1930년대까지도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40년대초 이래 공산당측에서 혁명의 대상을 규정하는 문제, 본질적으로 국민당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혁명전략 문제와 관련되어, 국공간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포된 개념상 미묘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민족자본과 대립되는 존재로 파악되게 되었다.

모택동(毛澤東)은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1939.12)에서 민족자본가와 구별되는 ‘매판성을 띤 대자본가’를 혁명의 타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계급연합을 추구한 「신민주주의론」(1940.1)에서는 대자본가를 포함한 자본가계급 일반의 혁명성과 타협성을 인정하였고, 「연합정부론」(1945.4)에서도 대자본가·대은행가·대매판이기도한 관료자본을 원조한 국민당 지배집단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관료자본은 관료들의 사적 자본을 지칭하고 있는데, 내전에서 전황이 공산당의 승리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관료자본 속에 사적자본과 국가자본을 모두 포함하는 용법으로 바뀌어, 오랫동안 민족자본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래 촉망받던 소장학자 두순성만 하더라도, 관료자본을 사적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여 그 기본 특징을 국가자본으로 파악하며, “구중국 자본주의 경제는 관료자본과 사적 자본이라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였다. (『官僚資本與舊中國社會性質』, 『社會科學』 1982-11期) 그러나 본서에서는, 관료자본이 내포하는 범위가 확

대되어, 관료·매판의 사적 자본도 포함하게 되어 外延이 모호하고, 한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통속 명칭이어서 중국근대경제사 연구에 곤란을 조성하였다며, 국가자본과 사적 자본을 민족자본을 구성하는 두 요소로 설정하였다.

종래 관영, 관독상판(官督商辦), 관상합판(官商合辦) 그리고 국영기업 부분을 모두 관료자본의 범주로 파악하던 두순성은 본서에서 그것을 국가자본이라 지칭했고, 일반적으로 관료자본기업으로 간주되던 북경정부시기 고관들의 기업 투자를 “군벌과 관료의 투자도 상인, 매판, 지주 등의 투자와 같이 중국민족사인(私人)자본의 근원의 하나이다”(P. 205) 라 하여, 사적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어, 근래 관료자본을 본질적으로 사적 자본으로 파악하는 학계 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관료자본을 의사국가자본이라 보기도 한다),

청말 이래 국가자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 두순성은 자본주의의 자주적 발전의 길이 불가능한 반식민지 경제 낙후국가 중국에서는, 자유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사적 자본주의가 발전한 후에 국가 정권이 경제에 참여·개입하는 서구의 일반적 발전과정과는 달리, 산업자본이 국가자본주의 형식으로 출발한 것은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보았다. 청정부가 서구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이식하여 서구자본주의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북경정부시기에는 금융자본을 중심으로한 경제세력이 정립되었지만, 중앙정부가 통일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경제영역을 지배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이 시기 동안 사적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 때마침 세계 제1차대전으로 유럽 세력이 중국 시장에서 퇴조한 상황이라 민족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부시기는 이미 사적 자본이 상당히 발전한 상황에서, 통일된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여, 금융·교통·공업생산의 전경제영역을 지배해감으로써 사적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1935년 폐제개혁 이후의 국가자본주의 성격의 강화를 두순성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의 시작으로 파악하였다.

종래 ‘통설’에서 중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자본 주도의 경제정책 실행이라는 국가자본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항일전 말기에서 내전기간 특히 소위 ‘4대가족(蔣, 宋, 孔, 陳)’의 독점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합되어 성립된 반동적 매판적 자본으로 장개석(蔣介石) 반동정권의 경제 기초이므로 타도 대상이라 규정되었다. 관료자본과 국가자본이 혼용되어 이해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국가독점자본이라 규정한 것은 사실상 국가자본이며, 당시 전시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이 증시되면서 국가적 독점자본주의로 파악하는 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두순성이 폐제개혁 이후 중앙정부가 지배발행권을 독점한 것을 ‘금융 농단’이라 보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전국의 생산에 대한 지배 체제인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화폐제도의 문란이 전국적 통일 시장의 형성이나 근대 산업 발달의 첫번째 장애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에서, 폐제의 통일이 요구되어 왔으나 중앙정부의 권력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고 정책 집행도 궤도 오르지 못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남경국민정부도 수립후 8년이 경과하며, 지방군사세력에 대한 지배권도 강화하고 권력을 상당히 집중시킨 바탕 위에 폐제개혁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폐제개혁의 상당한 성공으로 이후 경제가 안정되고, 산업 건설이 촉진된 효과를 거두었음이 최근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두순성의 주장대로 지방세력의 경제력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겠지만, 폐제개혁의 불가피성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것을 부정적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겠다. 1935,36 이후 강화된 국가자본부문도 이미 일본과의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정부기관인 자원위원회의 주관, 장악이 진행되어 갔다. 이러한 산업통제와 전시의 무역과 상업통제에 대해서도 전시경제를 어렵게 지탱할 수 있었던 다분히 성공적 정책 운영으로 평가되는 근래 연구성과를 고려하면, 국민정부의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그 정권의 봉건성의 명백한 반영으로 파악하는 (두순성, p. 283) 논지는 편향된 관점으로 보인다.

『민국사회경제사』의 입장은, 장개석정권시기에 국가의 국민경제부문에 대한 지배와 간여가 증대되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항일전 시기는 전시경제체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공내전기간에 한정해서 국가독점자본과 관료자본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자본이 정부에서 나왔고, 정부 관리가 경영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비해, 후자는 관료 개인의 투자와 한 명 또는 수 명의 관료가 경영권을 갖는 기업인데 관료들이 수종의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경제 부문을 조종하며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구별해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의 동맥을 통제하는 국가독점자본에 대해서도 사적 민족자본의 발전을 저해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민족자본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중국경제의 근대화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은 매우 신축성 있는 자세라 생각된다. 최근 관료자본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향과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하되 국가독점자본과 마찬가지로 그 범주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설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또한 관료자본주의나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 개념은 사용하지 않아서, 종래 (국가)독점자본주의 같은 사회체제 개념과 독점자본이나 관료자본 같은 자본 분류 개념이 혼용되어 온 풍토와 구별되는 학문적 엄밀성 추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두순성은 국가독점자본이 여러 자본형태 중의 하나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경제를 지배하는 '주도적' 지위를 점한다고 보아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한 것이 차이점이다.

전기했듯이 청말 국가자본이 수행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했을 뿐 아니라, 두 책은 모두 북경정부시기와 남경국민정부시기의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 공평하게 분석·평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 하다. '實事求是' 추구의 사회 분위기에 힘입기도 했겠지만, 북경정부 시기에도 농업 부문에서 부농경제와 상업성농업의 진전이 있었다든가, 남경정부의 수입관세인상정책과 통과세(이금) 폐지로 상공업자에 유리한 면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국내 경공업의 발전으로 수입품이 줄고 상당 부분 국내제품이 대체하게 되어, 1920년대 후반이래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각국의 경제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의 경공업 생산품의 수출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생산품의 입초액이 1912년의 34000万元에서

1926년 42300万元으로 증가했다가, 1933년 11600만원, 1936년 4000만원으로 감소되어 갔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발전 추세 중에서도 면방직업, 제지업, 성냥제조업 같이 외국자본과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는 빠른 자본 축적과 자본 집중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모두 자본주의가 발전의 궤도에 오르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로서, 두순성에 의해 새롭게 분석, 제기된 입론이다.

남경국민정부의 경제정책이 외국자본주의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 민족자본주의를 촉진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매판적’ 정권에 대한 획기적인 평가에 속한다. 사실 남경정부의 관세자주권 회수를 위한 조약개정은 정권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이며, 근래 국민정부에 대한 재평가의 근거로 중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책의 특징들은 대부분 진작 그렇게 파악되었어야 할 당연한 일들로 보일 지 모르지만, 한번 뒤틀린 궤도를 바로 잡는데 30-4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경제사 연구 자체의 문제였다기 보다, 혁명 전략에 관한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쏟아지는 탄탄한 학문적 성과들을 접하면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학문적 열정이 숨어서 살아있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빠른 학문적 발전을 예상하게 된다.